

대전광역시 원자력안전시민협의회 운영조례안

의안 번호	323
----------	-----

제출연월일 : 2008. 5. 7.

제 출 자 : 대전광역시장

1. 제안이유

원자력 관련시설의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효율적인 안전대책 및 체계적인 방사능 방재대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협의·자문하기 위한 대전광역시 원자력 안전시민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대전광역시 원자력안전시민협의회의 기능에 대하여 정함(안 제2조).
- 나. 대전광역시 원자력안전시민협의회의 구성에 대하여 정함(안 제3조).
- 다. 위원장, 위원의 임기 및 회의에 대하여 정함(안 제4조 내지 제6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의사항 : 해당 없음
- 라. 기 타

(1) 규제심사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2) 입법예고 : 2008. 3. 21. ~ 4. 10. / 접수의견 1건(반영 1건, 별첨)

대전광역시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원자력안전시민협의회 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자력 관련시설의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효율적인 안전대책 및 체계적인 방사능 방재대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고 대전광역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대전광역시 원자력안전시민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대전광역시 원자력안전시민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자문한다.

1. 원자력 관련시설의 효율적인 안전사고 예방대책 및 사고발생 시 수습과 재발 방지대책에 관한 사항
2. 원자력 관련시설 주변지역의 환경 및 방사능 방재계획상 주민 안전에 관한 사항
3. 원자력 안전을 위한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원자력 안전 및 방사능 방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조(구성) ①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협의회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선임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대전광역시장의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의회의원 또는 유성구의회의원
2. 대전광역시 또는 유성구 소속의 원자력 업무관련 4급 이상 공무원
3. 소방 또는 경찰직 공무원
4. 원자력 관련 교수 또는 연구기관의 전문가
5. 원자력 관련기관의 부장급 이상의 자
6. 원자력 관련시설 인근 지역주민 대표
7. 환경 또는 원자력 관련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8. 그 밖에 원자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임기)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회의) ①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및 서기)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방재과장이 되고, 서기는 민방위비상대책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8조(실무협의회) ①협의회 사무처리의 전문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실무협의회는 위원장이 지명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9조(의견의 청취)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조례안 입법예고결과 의견반영계획

☐ 관련 조례안

- 명 칭 : 대전광역시 원자력안전 시민협의회 운영조례안
- 입법예고기간 : 2008.3.21~4.10(20일간)
- 의견제출 : 1건(조혁, 충남대학교 교수) / 제출방법 : 전화('08.4.2)
- ⇒ 조례안 제3조(구성) 제3항 제5호에서 규정한 “원자력 **관련기관의 임원**”의 용어가 적합한지 여부 재검토 요청

☐ 의견 반영안

조 례 안	반 영 안	사 유
제3조(구성) ①~②생략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전광역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회의의원 또는 유성구회의의원 2. 대전광역시 또는 유성구 소속의 원자력 업무 관련 4급 이상 공무원 3. 소방 또는 경찰직 공무원 4. 원자력 관련 교수 또는 연구기관의 전문가 5. <u>원자력 관련기관의 임원</u> 6~8. 생략	제3조(구성) ①~②생략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대전광역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회의의원 또는 유성구회의의원 2. 대전광역시 또는 유성구 소속의 원자력 업무 관련 4급 이상 공무원 3. 소방 또는 경찰직 공무원 4. 원자력 관련 교수 또는 연구기관의 전문가 5. <u>원자력 관련기관의 부장급 이상의 자</u> 6~8. 생략	※ 아래와 같음

☐ 반영사유

- 원자력관련기관(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확인 결과 “임원”이라함은 원장과 감사가 해당되어 입법취지와 다소 다른 점이 있어,
- 원자력에 관한 전문성이 확보된 “원자력관련기관의 부장급 이상의 자”로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 (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 (자문기관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언·권고·건의·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